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 哲 元

지역리포트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 哲 元

국문요약

본 연구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를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헝가리 금융여건의 현 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동구 국가들의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로 인해 헝가리 금융환경의 현 주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개혁에 적용 가능한 많은 실험적인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헝가리의 금융여건 개발과정을 통해 인근의 후발 개혁국들의 금융여건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혁 추진성과와 현재의 금융여건 발전 정도 등의 측면에서 동유럽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헝가리를 대상으로 경제개혁 현황을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전체적으로는 헝가리가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0년 말부터 최근까지이다. 그러나 금융개혁 현황에 대한 중점연구대상기간은 헝가리의 금융개혁이 한창 이루어졌던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이다. 물론 헝가리의 금융개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전반의 금융지표와 함께 가능한 한 최근까지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헝가리의 경제개혁 개관, 금융개혁의 추진현황,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등의 순서로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한 헝가리의 경제개혁을 분석, 정리하고 있다. 또한 결론부문에서는 선발주자로서 헝가리의 금융개혁 경험으로부터 후발주자인 여타 중·동구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을 본격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여타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등 이른바 헝가리의 양호한 초기 여건이 성공적인 경제개혁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舊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는 등 헝가리는 이미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 경험이 풍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초기 여건과 풍부한 경제개혁 경험만으로 헝가리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헝가리도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처럼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개혁 실패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때로는 개혁 후 유증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과 완만한 경제회복에 따른 低성장을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헝가리가 이와 같이 단절 없는 경제구조 개혁을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과 개방에 대한 범국민적인 동의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서구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감한 개혁과 개방뿐이라는 인식이 체제전환 초기에 범국민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기본적인 경제개혁노선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변화나 단절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부문별 경제개혁에 있어 헝가리는 특히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된다. 헝가리 금융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측면과 금융지표를 통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회복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부문의 건전성 개선도 두드러졌다. 하지만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중개능력 향상은 아직까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헝가리의 금융개혁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곧 대외신인도에도 반

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개발수준에 따라 동구 체제전환국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부문 개발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혁선도국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포함된다. 둘째는 개혁선도국 그룹을 부지런히 뒤쫓고 있으나, 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개혁도상국 그룹이며, 여기에는 체코와 슬로베니아가 해당된다. 셋째는 구체제와 신체제가 혼재하고 있는 부분개혁국 그룹이며,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가 이 그룹에 속한다. 넷째는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개혁실패국 그룹이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금융부문이 제일 취약하여 언제든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재발위험국 그룹이다.

헝가리와 같은 개혁선도국 그룹의 금융개혁사례는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향후 자국의 금융부문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매우 유익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진한 부분개혁국 그룹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실패국 그룹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헝가리의 금융개혁 경험이 귀중한 정책대안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헝가리의 금융개혁사례로부터 그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운영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및 제도구조조정(institutional restructuring)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금융개혁은 재무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 및 내부지배구조 개혁 등의 운영구조조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견제하는 제도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운영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에는 민

영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선진 외국은행을 민영화에 참여시키면 해당 금융기관 운영의 합리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이 강화되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만 추진하면 금융위기의 극복이 지연되거나 위기가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기업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면 이로 인해 다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된다.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1
3. 연구의 구성	13
제2장 헝가리의 경제개혁 개관	15
1. 초기 여건과 경제개혁 전략	16
가. 초기 여건	16
나. 경제개혁 전략	18
2. 주요 경제개혁정책	20
가. 가격자유화 및 무역자유화	20
나.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24
다. 국영기업 민영화	27
라. 제도적 인프라 구축	29
3. 경제개혁정책의 성과	33
가. 거시경제적 성과	33
나. 주요 경제체제전환 성과	35

제3장 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평가	37
1. 금융개혁 추진현황	37
가. 제도적 기반 구축	38
나. 건전성 규제 및 은행감독체계 강화	41
다. 은행민영화	43
라. 금융부문의 부실여신 처리	45
2.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48
가. 제도적 측면의 금융개혁 성과	49
나. 금융개혁성과지표 분석	51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문헌	64
 Executive Summary	67

표 차례

<표 2-1> 헝가리의 경제개혁 경험	17
<표 2-2> 체제전환 초기의 헝가리 인플레이션 추이	21
<표 2-3>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의 수입자유화 비율 추이	22
<표 2-4> 헝가리의 가격 및 교역 관련 지표 추이	22
<표 2-5> 헝가리의 주요 금리 추이	26
<표 2-6> 헝가리의 재정수지 추이	30
<표 2-7> 헝가리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34
<표 3-1> 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동향	39
<표 3-2> 헝가리의 부실여신 처리방법	46
<표 3-3> 중·동구 주요국 금융제도 관련법률의 포괄성과 효율성	50
<표 4-1> 헝가리의 대외신용등급 변화 추이	58
<표 4-2>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부문 개발정도 구분	60

그림 차례

<그림 3-1> 민간부문의 신용비중	52
<그림 3-2> 총통화 비중	52
<그림 3-3> 중·동구 주요국의 부실여신 비중 추이	53
<그림 3-4> 예대금리차 추이	54
<그림 3-5> 총예금대비 현금비율	55
<그림 3-6> M1/M2 비율	5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헝가리는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착수하였고, 이를 위해 추진한 경제개혁의 성과 또한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감한 개방 및 경제개혁의 성과로 헝가리 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헝가리는 1997~2001년 동안 연평균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안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거시경제정책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불황의 여파가 심했던 2002년에도 헝가리는 4.0%의 경제성장을 기록,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양호한 경제실적을 나타내었다.¹⁾ 지난 2002년 4월 OECD의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에서도 효과적인 경제개혁의 추진이 헝가리를 시장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헝가리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개혁은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었다.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 정부가 경제개혁을 전개하면서 부딪힌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가 은행부문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이었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이와 같은 금융부문 부실화는 경제개혁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중·동구의 여타

1) EBRD(2002)에 의하면, 2002년에 폴란드와 체코가 각각 1.0%와 2.5%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부의 6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과 발틱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중·동구 9개국의 2002년 가중평균 경제성장률은 2.2%로 추정된다.

체제전환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본 연구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를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헝가리 금융여건의 현 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동구 국가들의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헝가리의 금융개혁 이후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헝가리의 금융시스템은 거의 서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헝가리의 금융개혁이 후술하는 채무기업 부실채권 정리, 효과적인 은행민영화 및 선진외국은행의 참여, 기업구조조정과의 병행 등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헝가리 금융개혁에 대한 현황 파악은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금융환경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의 신흥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로 인해 헝가리 금융환경의 현 주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개혁에 적용 가능한 많은 실험적인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동구 진출을 확대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헝가리의 금융개혁사례를 바탕으로 여타 중·동구 국가가 향후 자국의 금융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대체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헝가리의 금융여건 개발과정을 통해 인근의 후발 개혁국들의 금융여건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내자료는 주로 외국의 금융위기 및 금융개혁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추진, 헝가리의 금융개혁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헝가리의 경제개혁 전반과 금융개혁사례에 대해 언급된 다수의 외국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헝가리의 금융부문 발전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선진국, 여타 체제전환국 등과 비교할 수 있는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특히 헝가리의 금융개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IMF, World Bank, EBRD, BIS, OECD 등의 금융통계는 물론 헝가리 중앙은행(NBH)으로부터 입수한 통계를 성과분석지표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헝가리의 구체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민영화 사례에 대해서는 上記와 같은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2002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체류하면서 금융개혁 및 은행민영화 담당 정부부처와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사정을 외국문헌들의 평가와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현지 기업인 및 통신회 등을 통해 최근 헝가리의 금융여건 개선정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지금까지 중·동구 지역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본원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후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개혁사례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으나, 중·동구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 중남미 및 아시아의 신흥시장에 대한 금융위기사례는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였다. 외국의 금융개혁사례에 대한 국내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로 선진국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과 아시아 및 중남미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원에서는 최근까지 중·동구의 EU 가입 전망과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현재 동구 체제전환국의 전반적인 경제개혁과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동구 지역에 대한 연구는 헝가리와 같은 가장 모범적인 개혁성공사례를 선정하거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개혁실패사례를 선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중 금융부문의 개혁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경제개혁의 핵심이며, 헝가리의 금융부문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다른 부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문헌에는 중·동구 각국의 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있으나, 지나치게 개괄적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중·동구 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외국문헌은 불가리아와 같이 주로 위기가 계속 재발되어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의 금융개혁에 대한 외국문헌의 연구는 CIS 및 발틱 국가들과 함께 동구의 체제전환국 혹은 유럽의 금융위기 경험국과 같은 광범위한 범주에서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경제개혁 추진성과와 현재의 금융여건 발전정도 등의 측면에서 동유럽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헝가리를 대상으로 경제개혁 현황을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전체적으로는 헝가리가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0년 말부터

최근까지이다. 그러나 금융개혁 현황에 대한 중점연구대상기간은 헝가리의 금융개혁이 한창 이루어졌던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이다. 물론 헝가리의 금융개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전반의 금융지표와 함께 가능한 한 최근까지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헝가리의 경제개혁 개관, 금융개혁의 추진현황,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등의 순서로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한 헝가리의 경제개혁을 분석, 정리하고 있다. 또한 결론부문에서는 선발주자로서 헝가리의 금융개혁 경험으로부터 후발주자인 여타 중·동구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1989년부터 시작된 헝가리의 경제개혁정책 전반에 대해 개관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개혁 추진 직전 헝가리의 초기 여건과 경제개혁전략을 분석한 다음, 가격자유화 및 무역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국영기업 민영화,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헝가리의 주요 경제개혁정책을 분석,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헝가리 경제개혁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성과와 경제체제전환 성과로 나누어 분석, 평가한다.

제3장에서는 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다. 제도적 기반 구축, 건전성 규제 및 은행감독체계 강화, 은행민영화, 금융부문의 부실여신 처리 등의 순서로 금융개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다음, 제도적 측면의 금융개혁 성과와 금융개혁성과지표를 활용한 금융개혁 평가를 통해 헝가리의 금융개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헝가리 경제개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성공요인 분석과 함께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를 다시 요약, 정리하면서 성공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헝가리의 금융개혁경험이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부문 발전에 어떠한 시사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제2장 헝가리의 경제개혁 개관

헝가리의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정책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다. 체제전환 초기부터 대규모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주도하는 직접매각이 시행되었으며, 민영화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융·자본시장의 인프라 도입이 병행되었다. 경제활동의 자유화는 이미 구체제 말기에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추가적인 경제활동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경제개혁 결과 1990년대 후반 헝가리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계획·지시 및 통제가 사라졌으며, 서구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원칙이 확립된 가운데, 개별 경제주체들은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해 헌법은 물론, 민법을 비롯한 기본법의 체계가 바뀌었고, 나아가 회사법, 은행법과 같은 각종 법규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입법 및 사법제도도 개혁되었다.

헝가리는 이와 같은 경제개혁 추진성파에 있어 여타 중·동구 국가들에 비해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헝가리 경제개혁을 개관하기 위해 먼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 헝가리 경제의 초기 여건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경제개혁전략과 함께 주요 부문별 경제개혁정책을 정리한 뒤, 헝가리 경제개혁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한다.

1. 초기 여건과 경제개혁전략

가. 초기 여건

우선 정치적으로 헝가리는 체제전환 직후 구체제시절의 재야세력이 공산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았다. 1990년 3월 체제전환 이후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헝가리민주포럼(MDF)이 의회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중도우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헝가리민주포럼을 비롯하여 체제전환 이후 집권세력 내지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주요 정당들은 대체로 구체제시절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재야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들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초기 여건으로는 첫째, 헝가리가 구체제시절부터 상당한 경제개혁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둘째, 구체제시절부터 막대한 외채에 시달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 있어 헝가리는 여타 동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과는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즉 헝가리는 구체제시절부터 경제개혁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할 당시, 이미 헝가리는 시장경제 운영을 위한 상당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어,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은 1950년대 이후 헝가리에서 추진된 주요 경제개혁사항들을 정리한 것인바, 헝가리의 경우 구체제시절부터 꾸준히 시장경제체제와의 접목을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舊체제시절 헝가리에서의 경제개혁 움직임은 1968년 新경제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더욱 고조되었으나, 어려웠던 경제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개혁 움직임은

정치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주로 제한적인 민주주의 추세로서 체제의 본질적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표 2-1〉 헝가리의 경제개혁 경험

시 기	주요 개혁 내용
1956	개인농 및 협동농장의 강제수매제도 폐지
1962*	트러스트(기업연합) 및 대기업 형성, 농업의 집단화 완성
1968	신경제메커니즘(NEM) 도입 - 국가경제계획은 거시경제 중심의 유도계획에 국한, 국유기업의 각종 계약체결, 이윤배분, 제품결정, 대외무역, 투자결정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율성 허용, 사유농 개시
1971*	대기업 중심의 부분적 중앙집권화
1972	신축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별 ‘임금·자금 통제’ 제도의 도입
1980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개혁
1981	소규모 사기업 합법화
1982	국제금융기관 및 EC 등과의 유대 강화, 관광 및 상업용 환율의 단일화, 채권시장 도입
1985	기업의 자율적 통제를 담당하는 기업평의회(enterprise council) 제도 도입
1986~87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분리, 상업은행 영업 개시
1988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에 의한 세제개혁, 광범위한 가격자유화
1989	수입자유화, 기업에 대한 수출면허 확대, 노동현장으로부터의 공산당 철수, 노동조합 특혜 제한, 공개적 실업 인정
1990	공산당 권력 상실 및 권한 축소, 지방자치기구 설립, 민영화 개시
1991	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 거의 완료 농업 및 가계부문에 대한 보조금의 격감, 루블貨 무역 금지

주: * 개혁후퇴기간.

자료: 홍유수(1992).

한편 헝가리는 구체제시절부터 상당한 규모의 외채를 안고 있었는데, 1980년대 말 체제전환 당시부터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1인당 외채규모가 가장 높은 국가였다. 1990년 말 헝가리의 외채총액은 212억 7,000만 달러로, 외채규모에 있어서도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484억 7,5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외채총액은 2,054달러로 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헝가리의 외채는 2001년 기준 GDP 대비 63.6%로 아직도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²⁾

나. 경제개혁전략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 정부는 경제체제의 전환속도에 있어 폴란드와는 달리 다소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헝가리는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혁과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용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90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헝가리민주포럼(MDF) 정부는 포린트화에 태환성을 부여해 대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환율 안정 및 인플레이 억제 등에 주력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는 헝가리가 체제전환 초기 개혁정책의 중점을 ‘대외경제관계의 개선’과 ‘대내경제의 균형 및 안정 달성’에 두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헝가리가 체제전환 당시 막대한 규모의 외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이와 같은 점진적 개혁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이로부터 알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이 시작된 1990년대 초반에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정책의 우열을 놓고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사이의 논쟁이 있

2) EBRD(2002)에 따르면, 2001년 폴란드는 GDP 대비 외채비율이 39%이며, 체크는 38.2%이다.

었다. 1990년대 동안의 경제개혁정책과 체제전환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급진주의 및 점진주의적 경제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급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이 불필요한 고통과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체제의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점진주의자(gradualist)들의 가정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점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이 적용되었으나, 이 두 국가는 모두 지난 1990년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과 혼란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체제전환의 성과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중·동구에서 가장 급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을 택했던 폴란드의 경우, 초기에 단기적으로 극심한 물가상승과 생산위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안정화를 이룸으로써 체제전환기의 혼란과 고통이 오히려 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점진주의보다는 급진주의적인 체제전환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체제전환의 전략인 것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헝가리의 경제체제 전환정책은 폴란드와 같이 전면적·급진적이지 않아 흔히 점진적인 경제개혁정책으로 분류된다. 헝가리의 경제개혁정책이 이같이 점진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것은 주로 1990년대 초반에 급격한 경제자유화 및 안정화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체제전환 첫 해인 1990년에 헝가리 정부는 가격자유화 및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임금규제 및 고금리정책과 같은 경제안정화 정책도 1991~93년 사이에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채택되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 및 금융·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동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신속한 변화를 지향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점진주의적 체제전환정책을 시행했다기보다는 분야에 따라 선택적인 점진주의 정책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헝가리가 이처럼 점진주의적 정책을 적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체제전환의 성과를 보

임으로써, 폴란드와 같이 급진주의적인 경제개혁정책만이 신속한 체제전환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제체제전환정책의 급진성 또는 점진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체제전환 직전까지 시장제도의 경험이 없던 국가에는 소폭의 가격자유화나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큰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게 되어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식될 것이다. 구체제에서 이미 경제자유화, 환율일원화, 상업은행제도, 일부 민영화 등이 진전되어 있었던 헝가리의 비교적 점진적인 경제개혁정책도 경제개혁의 경험이 없었던 루마니아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으로 평가될 것이다. 폴란드에서 실행된 급진주의적 경제개혁정책 역시 헝가리에서 적용되었다면 폴란드에서와 같은 초기의 혼란과 불안정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의 경우, 1990년에 폴란드나 헝가리보다 점진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기 여건이 급진주의적 정책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효율적인 경제개혁정책의 모델로서 특정한 형태의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정책 사이의 우열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경제개혁정책

가. 가격자유화 및 무역자유화

체제전환 직후 헝가리 정부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시장(Seller's market)이 수요자 위주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가격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1년 1월 거의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다. 헝가리는 1991년까지 가격자유화 비율을 약 90%까지 확대하였으나, 가격자유화에 따른 생필품의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일부 품

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제하였다.

이러한 가격자유화로 헝가리는 1990년과 1991년 30%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은 동유럽 체제전환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³⁾ 1991년을 기준으로 동유럽 국가 중 50%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국가는 헝가리뿐이었으며, 50~100% 정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국가 역시 폴란드(60.4%)와 舊체코슬로바키아연방(55%)뿐이었다. 이처럼 헝가리의 물가상승률이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 낮았던 이유는 체제전환 이전인 1980년대 초부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2-2〉 체제전환 초기의 헝가리 인플레이션 추이(1989~93년)

(단위: 연평균, %)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소비자물가 상승률	17.0	28.9	35.0	23.0	22.5
생산자물가 상승률	15.4	22.0	32.6	11.5	10.8

자료: EBRD(1995); WIIW(1999).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외채를 안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내가격을 먼저 자유화한 후 경상수지 상황을 보아가면서 대외 무역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1990년에만 해도 수입자유화율이 37%에 불과하였으나, 당시 경상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수입자유화를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3) 이는 CIS 국가들이 제외된 것인데, CIS 국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아르메니아만이 1991년 당시 25%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을 뿐, 거의 모든 CIS 국가 역시 10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EBRD, 1999)

1991년 말까지 수입자유화 비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서방의 소비재와 전기·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 많은 제품이 수입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입자유화율은 72%에 머물렀다.

〈표 2-3〉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의 수입자유화 비율 추이(1985~91년)

(단위: %)

구 분	1985	1987	1989	1990	1991
수입자유화 비율 ¹⁾	0	0	16	37	72
제조업 제품의 최고 관세율	50	50	50	50	50
평균관세율(단순평균)	18	16	16	16	13
보조금의 對GDP 비율	15	16	13	9	7

주: 1) 국내 총생산액 중 수입자유화 품목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EBRD(1995).

〈표 2-4〉 헝가리의 가격 및 교역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非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수출비중	12.2	78.7	81.3	78.2	79.1	77.7	77.0	81.2	84.3	57.9	87.2	84.4
GDP 대비 교역비중	n.a.	27.4	27.0	50.4	45.4	62.8	68.6	90.2	93.2	95.5	112.2	109.3
수입액 대비 관세수입 비중	n.a.	9.1	11.8	12.3	12.7	13.0	9.7	4.0	2.7	2.5	1.8	1.1

자료: EBRD(1999 & 2002).

舊체제시절부터 존재하였던 수출입허가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석유, 방사능 위험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비철금

속, 국가안보 관련품목, 환경보호 및 보건, 신경성 의약품, 향정신성 물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992년에는 통신, 의약품,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재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힘입어 舊사회주의권이 아닌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2-4>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1990년에만 해도 12.2%에 불과하던 非체제전환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1991년에는 78.7%로 급증하였다.

헝가리에서 자국통화의 태환화는 중앙계획경제시스템이 폐기되고 시장경제화가 추진되면서 금융측면보다는 주로 실물경제측면에서 자국통화의 신뢰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헝가리의 가격체계가 국내 경쟁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자유화를 통해 경쟁촉진은 물론 시장가격체계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헝가리에서 자국통화의 태환화 문제는 국내가격을 자유화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여기서 합리적 가격체계의 정착은 舊체제하에서의 가격왜곡에 따른 시장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코메콘체제 해체 이후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전에 이미 환율을 일원화한데다, 체제전환 초기 대외무역의 자유화와 아울러 수출에 의해 취득한 외환 중 일부를 기업이 보유하거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환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상거래에 대한 통화의 태환성(convertibility) 확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체제전환 직후인 1991년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는 상업환율, 여행자환율, 그리고 공정환율 등 특정목적과 거래종류에 따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던 환율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원화된 환율을 실제환율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 헝가리는 1989년 1월에 이미 외국환관리를 자유화하여 상업은행의 외화예금을 허용하였으며, 그 해 3월에는 상업은행

의 외환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일찍부터 외환시장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1989년 7월에는 은행의 외화대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1990년 1월부터 기업의 외환보유 및 외환매입 허용 등 외환의 중앙집중의무가 없어지는 등 외환거래가 일부 자유화되었으나, 자본거래를 위한 외환보유나 매매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 자본거래에 대한 태환성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처럼 체제전환과 함께 헝가리가 실시하였던 태환화는 이른바 내적 태환화로 해외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에게 공정한 환율하에서 외환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⁴⁾ 그러나 내적 태환화가 전면 허용되었던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태환범위의 규제나 국내기업에 대한 외환수입대금의 매각 의무화 등의 제약조건이 존재하였고, 외국인의 경우는 포트폴리오화를 해외에 보유하거나 국내의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반면, 이윤송금이나 자본송금은 허용되었다. 즉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 내적 태환화만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윤송금 보장이 중요한 투자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부 외적 태환화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나.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체제전환 이후 추진한 재정개혁은 초기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수반할 뿐

-
- 4) 일반적으로 태환화는 경상거래의 태환화(current account convertibility)와 자본거래의 태환화 또는 완전 태환화(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unrestricted of full convertibility)로 대별되나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는 내적 태환화(internal convertibility)와 외적 태환화(external convertibility)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념 구분은 자국통화를 외환과 교환하는 데 있어 태환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교환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것이다. 즉, 내적 태환화는 내국인에게 공정한 환율에 의거하여 자국통화의 외환과의 교환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적 태환화는 외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IMF, 1996).

만 아니라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였다.⁵⁾ 1990년에만 해도 정부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1992년에는 조세수입 감소와 지출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약 7%에 이르렀다.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낮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과세실패와 탈세 등의 이유로 특히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였으며, 당시 극히 부진했던 민영화 역시 재정수지 적자의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헝가리 정부는 세수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세출억제에 더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헝가리 정부는 과세의 기준을 법인세 중심에서 탈피하여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 중심으로 이동시켰다. 게다가 헝가리 정부는 각종 보조금의 삭감, 공공투자의 축소 등 세출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진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과감히 축소시켜야 했으며, 구체제시절부터 지급하였던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실업증가 등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후유증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회보장의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의 축소보다는 이의 확대를 억제하는 데 주력하였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93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3년에는 同 비율이 54.6%에 이르렀다.⁶⁾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1993년에는 8.9%로 체제전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적자는 주로 중앙은행(NBH)에 의한 차입이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보전되었으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중앙은행이 고금리정책을 견지하였다. 통화공급 규모 역시 1990년 이후 증가율을 낮추었다. 국채 발행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된 국채를 전

5) 여기서는 거시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체제전환 초기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만 집중 언급하고 있는바, 전반적인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참조하기 바란다.

6) EBRD(1999), p. 229.

액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해 적자가 보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한 고금리정책은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정부의 외채상환비용 증가 등이 그것이다.

〈표 2-5〉 헝가리의 주요 금리 추이(1991~2001년)

(단위: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할인율	n.a.	n.a.	n.a.	25.0	28.0	23.0	20.5	17.0	14.5	11.0	9.8
은행간 금리 (30일 만기 이내)	n.a.	n.a.	21.8	31.3	27.8	23.2	19.7	17.3	14.5	11.9	10.0
예금금리(1년)	31.1	17.6	17.2	22.9	24.4	18.6	16.3	14.4	11.9	9.9	9.4
대출금리(1년)	35.5	28.8	25.6	29.7	32.2	24.0	20.8	18.8	19.4	12.8	12.0

자료: EBRD(1999 & 2002).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초과임금소득세제와 물가연동제(sliding scale system)를 도입하였다. 1991년 국영기업의 임금에 대한 조세규정을 개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초과임금소득세제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일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同 제도는 1993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는 명목임금 상승률을 인플레이율에 직·간접적으로 연동하여 결정함으로써 임금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노·사·정 3자협의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명목임금상승률이 중·동구 국가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가장 근접하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 정부가 우려한 것처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자유화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해 명목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1992년 이후의 긴축통화정책 및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플레이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됨에 따라 실질임금의 하락세가 계속되지는 않았다.

다. 국영기업 민영화

헝가리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있어 가장 커다란 특징은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방식을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이후 등장하는 ‘실질 소유자’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 선진기술, 마케팅기법 등 경영전문기술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였다. 헝가리가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방식을 선호하게 된 더욱 중요한 요인은 헝가리의 경우 외채문제가 심각하였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특히 외화수입이 보장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의 국영기업 민영화 전략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영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여타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 사용된 국민들에 대한 무상분배를 통한 민영화 방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혹은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과정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와 외국인투자자의 국영기업 인수가 기본적인 민영화 방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헝가리 정부는 민영화 목표 중에서 국유자산의 분배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기업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더 치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헝가리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포괄적인 계획안을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1988년부터 시작된 개별 국영기업의 자발적 민영화가 기본적인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여기에 국가자산청(SPA)

주도의 각종 민영화 프로그램이 중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국영기업의 매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량 유입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지만, 이 방식은 그 과정에 있어 투명성 문제나 매각가격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국내자본의 부족으로 내국인의 민영화 참여가 부진하였다. 따라서 헝가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E-Credit제도나 보상쿠폰제, 종업원지주 프로그램, 소액투자자 주식 매입 프로그램 등 내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비록 체크의 바우처 민영화나 폴란드의 대중적 민영화 프로그램처럼 폭넓게 내국인의 민영화 참여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민영화 실행 초기인 1990년부터 소위 E-Credit(Existence Credit)⁷⁾라는 금융지원제도가 실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는 舊체제 당시 자산을 몰수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쿠폰(Compensation Note)⁸⁾이 발행되어 국영기업의 주식매입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국영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me: ESOP)가 도입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국영기업 종업원들에 대한 자산임대제도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소액투자자 주식 매입 프로그램(Small Investor Share-Purchase Programme) 등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완제도가 전체 민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과거 공산정권에 의한 몰수자산의 원소유주 반환과 관련해서 헝가리는 미해결 자산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하는 부분 보상원칙이 채택되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빈약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은 현금이 아닌 보상증권(compensation note)의 지급형태로 이루어졌다.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후

7) E-Credit(Existence-Credit)은 헝가리 내국인이 국가자산청으로부터 국유자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상업은행들로부터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제도를 지칭하였다.

8) 보상쿠폰이란 최고 500만 포린트(forint) 한도에서 국가자산청이 지정한 국영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였다.

과거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몰수된 자산의 처리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보상법이 두 차례 제정되었다. 1991년 6월에 제정된 「제1차 보상법」은 공산주의 독재체제하에서 행해진 몰수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1992년 4월에 제정된 「제2차 보상법」은 파시스트 독재체제와 2차 세계대전 직후 행해진 몰수의 보상을 규율하였다. 이러한 헝가리의 보상법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몰수자산은 반환할 것이 아니라 원소유주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증서는 3년 동안 헝가리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75%에 해당되는 이자가 부가되는 양도 가능한 무기명증권으로, 국가에 대한 채권을 그 액면가로 기재해 놓은 증서이다. 보상증서는 민영화되는 자산·주식·기업지분 매수시의 지불수단, 농지 매수시의 지불수단, 특정 국유주택 매수시의 지불수단, 특정 목적을 위한 용자시 자기자본에 대한 증명자료, 종신연금의 기초자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였다.

헝가리의 미해결 자산문제는 반환원칙을 배제하고 있으나, 1991년에 제정된 「舊교회토지의 소유권관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회토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반환원칙이 적용되었다. 즉 1948년 1월 1일 이후 보상 없이 국유화된 교회(신학교, 수도원)의 토지는 同 법의 발효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있을 때에 한하여 원소유권자에게 반환되었다. 결국 헝가리는 현실적으로 원소유주의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제도적 인프라 구축

헝가리는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탈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혁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의 도입을 체제전환 직전인 1987년에 추진하였다. 이때부터 이미 헝가리

는 모든 금융거래를 수행하던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는 동구에서 헝가리가 가장 빠르게 금융개혁에 착수하였으며, 여타 경제부문의 개혁보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가장 먼저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⁹⁾

이러한 금융개혁에 이어 헝가리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였다. 여타 舊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이 그랬듯이, 헝가리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이 경제부문 가운데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헝가리 재정부문은 보조금 및 조세수단을 통해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물론, 기업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가계부문으로 소득을 대량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9년 헝가리의 GDP 대비 세입 및 세출 비중은 각각 61.3%와 63.8%로 당시 EC의 평균치인 43.6%와 46.5%에 비해 同 비중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재정부문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바, 헝가리는 재정균형을 지향하되 재정규모 자체를 줄여 민간부문에 의한 자원배분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표 2-6〉 헝가리의 재정수지¹⁾ 추이

(단위: %, GDP 대비)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정수지	-3.7	-7.6	-8.9	-7.5	-6.7	-5.0	-4.8	-4.8	-3.4	-3.3	-4.7	-6.0
정부지출	52.1	53.7	54.6	59.5	52.6	48.8	49.5	50.4	44.8	46.0	43.0	n.a.
정부부채	73.4	77.6	87.9	88.2	86.4	72.8	63.9	61.9	60.7	57.6	51.5	n.a.

주: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예산외기금 포함.

자료: EBRD(1999 & 2002).

9) 금융개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헝가리 정부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과감히 축소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가급적 경제에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시스템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국방비는 물론 구체제시절부터 지급되어오던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세수 증대를 위해 정부 보유 건물의 임대료가 인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1년 경기침체가 심화되기 이전까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GDP 대비 세출비중이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약 5%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세입비중도 4.5% 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개혁은 체제전환 초기 심각한 경기침체를 수반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이는 또 다시 재정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체제전환 당시 헝가리 조세정책의 핵심은 세제개혁과 세율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세제 면에서는 법인소득세(이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제도를 확립하고 매출세(turnover tax) 대신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두었다. 이로 인해 과거 구체제시절과 같이 세율이 개별 기업과 정부와의 협상에서 결정되기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소득세제의 확립은 개인의 소득 및 수입에 대한 과거의 다양한 조세를 단일화하여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세행정을 간소화하고 소득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헝가리는 1988년 1월 여타 동유럽 국가들보다 앞서 서방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세제인 부가가치세제(VAT)와 개인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헝가리는 1989년에 법인세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자본세, 수입세, 투자세, 도시발전기금 등의 세제는 철폐하였다.

체제전환 이전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해오던 헝가리는 체제전환과 더불어 금융 및 재정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同

적자분을 대부분 금융·자본시장을 통해 보전하게 되었다. 헝가리는 정부부채 규모가 구체제시절부터 누적되어온 데다 체제전환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는바, 정부의 차입금 규모는 헝가리 경제여력에 비해 아직도 큰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헝가리의 금융·자본시장은 여전히 국공채가 지배하고 있다.

체제전환 초기인 1989년 헝가리의 사회보장 지출 총액은 3,171억 포린트로 GDP의 18.6%를 차지하였으며, 同 지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문은 연금부문이었다.¹⁰⁾ 이처럼 당시 정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결코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작업은 실업인구의 증가, 빈곤계층의 확대, 그리고 개혁정책에 대한 각 집단의 반발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체제전환 초기의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당시 헝가리의 사회보장제도는 구체제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非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점증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는바, 그 개혁방향은 과거 정부가 부담하던 사회보장비용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기존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비용이 정부예산보다는 연금기금, 보건기금, 고용기금, 솔리대러티기금(solidarity fund) 등으로 구성되는 예산외기금(extrabudgetary funds)으로 충당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는 법인세 납세대상자들에게 직업훈련기금 조성세(professional training fund), 사회보장보험료(social security insurance

10) 1989년 기준으로 연금부문은 GDP 대비 9.1%, 보건 및 의료부문은 同 3.7%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OECD 1991, p. 67).

premiums), 급여보장기금(salary guarantee fund) 조성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세를 부담시켰다. 일례로 1989년 기준으로 고용주는 총급여의 53%를 사회보장보험료로 납부하였다.¹¹⁾

3. 경제개혁정책의 성과

가. 거시경제적 성과

최근의 경제상황과 그간의 거시경제지표 등을 고려할 때, 1989년 이후 진행된 헝가리의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의 과도기적인 어려움과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상황을 긴축기조의 강화, 경제 각 부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국영기업 민영화,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헝가리는 경제체제전환에 따른 자유화 등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과 과도기적인 혼란으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 초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세를 시현한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혁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 둘째 IMF 경제안정화 계획에 부응한 긴축정책 등의 부작용(생산 및 투자 감소), 셋째 에너지 부족, 넷째 가격자유화에 따른 인플레이, 다섯째 舊코메콘 체제 해체에 따른 수출시장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과도한 외채부담 등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4년 이후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헝가리는 재정 및

11) 이 중 43%는 고용주가, 10%는 종업원이 부담토록 하였으며, 同 세율은 점차 인하되었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로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시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된 요인으로는 1993년 이후 경제안정화조치에 기인한 시장혼란상황 진정, 점진적 경제개혁 성과, 공업생산 및 투자 증가, 그리고 EU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경상수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 이후 점증한 재정수지 적자 문제로 헝가리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표 2-7〉 헝가리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1989~2002년)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실질 GDP증가율 (%)	0.7	-3.5	-11.9	-3.1	-0.6	2.9	1.5	1.3	4.6	4.9	4.2	5.2	3.8	3.3
소비자물가 상승률 (%, 연평균)	16.9	28.9	35.0	23.0	22.5	18.8	28.2	23.6	18.3	14.3	10.0	9.8	9.2	5.3
재정수지 (%, GDP대비)	-1.4	1.0	-3.7	-7.6	-8.9	-7.5	-6.7	-5.0	-4.8	-4.8	-3.4	-3.3	-4.7	-6.0
경상수지 (%, GDP대비)	n.a.	0.4	0.8	0.9	-9.0	-9.4	-5.6	-3.7	-2.1	-4.9	-4.3	-2.8	-2.1	-2.4
외국인 직접투자 ¹⁾ (백만 달러)	187	311	1,459	1,471	2,339	1,097	4,410	2,279	1,741	1,555	1,720	1,090	2,103	2,559

주: 1) 국제수지 기준, 純유입액.

자료: EBRD(1996 & 2002); Global Insight(2003).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당시 사회당 정부는 1995년 초 긴축정책을 골자로 하는 긴급경제안정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및 경상수지 상황을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실추된 국가신뢰도를 만회하는 데 성공하였다. 同 시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헝가리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하였다.¹²⁾ 이러한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헝가리 정부는 IMF와 약 1년간의 협상 끝에 1996년 1월 3억 5,6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헝가리는 同 차관을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성장을 감수하는 강도 높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헝가리는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비율을 낮추었을 뿐 아니라, 총외채규모를 1997년 말 237억 달러로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은 물론, 향후 안정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성공하였다.

1997년 이후 헝가리는 본격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경제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1997년 이후 헝가리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1995년 이후 지속된 긴축 재정·통화정책의 효과, 둘째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노력, 그리고 셋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성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 역시 1996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주요 경제체제전환 성과

헝가리가 지난 1989년 이후 추진한 경제개혁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우선 자유화정책의 추진을 통해 완전한 금리자유화와 임금에 대한 규제 철폐, 경상거래의 태환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역자유화

12) ① 공공부문 임금동결을 통한 임금인상 억제, ② 공무원 축소, ③ 각종 사회보장지출 삭감, ④ 수입규제를 위해 잠정적으로 8%의 수입과징금 부과, ⑤ 엄격한 수입쿼터제 적용, ⑥ 크롤링페그制로의 환율제도 변경, ⑦ 포린트貨의 대폭적인 평가절하(9%) 등과 같은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에 힘입어 舊동구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2001년 말 현재 84.4%로 높아졌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교역의 비중이 2001년 말 기준으로 109.3%에 달하고 있다.¹³⁾

거시경제안정화정책과 관련해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 비중이 40%로, 폴란드 및 슬로베니아 등과 더불어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GDP 대비 정부의 對국유기업 보조금 지급비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바, 1991년에만 해도 同 비율이 5.7%에 달하였으나, 1997년에는 3.2%로 낮아졌다.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 25%에 불과하던 GDP 대비 민간부문의 비중이 2001년에는 80%에 이르렀고, GDP 대비 민영화 수입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30.3%로 상승하였다. 총고용에서 민간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부터 이미 80%를 초과하였다.

이밖에도 최근 연금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체제전환 초기 점증하던 의료·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부문에 대한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1992년 14%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001년에는 8.3%를 기록하였다.

上記와 같은 거시경제적 성과와 경제체제전환의 성공적 수행에도 불구하고, EBRD는 헝가리가 1999년까지도 1989년의 총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0년 이후에나 체제전환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BRD는 1999년의 헝가리 실질GDP 수준이 1989년의 99% 수준이었고,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同 104%와 112%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성공적인 체제전환모델로 평가되는 헝가리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는 데 약 10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EBRD(2002), p. 160.

제3장 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평가

1. 금융개혁 추진현황

1947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출범하면서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한 헝가리는 상업은행 기능을 중앙은행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으로서의 업무와 일부 투자업무까지 취급함에 따라 1987년 금융개혁이 추진되기 전까지 헝가리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집중적인 단일은행체제(Mono-Banking System)를 유지하여 왔다. 개혁 이전 중앙은행 이외의 은행으로는 국가개발은행, 대외무역은행, 국가저축조합 등이 있었으나, 모두 특정부문의 업무에 전문화하여 중앙은행을 대행하는 역할에 그쳤다.

이러한 단일은행체제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 저하, 저축의욕 감퇴로 인한 일반 여·수신기능 저하, 자금중개기능 저하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계획경제에서 금융은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수단으로 간주될 뿐이었으며, 금융체제 또한 중앙은행이 금융배분, 對기업 금융거래, 외환업무 등을 총괄하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통화수급에 있어 기업과 가계부문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자율이 자금의 수급과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결정되어 가격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신용배분도 기업실적이나 위험도 등의 기업 평가기준이 아닌 단순히 중앙은행의 행정배분에 따라 이루어져 금융시장이 자금배분과 금융중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금융체제하에서 헝가리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앞서 금융개혁이 불가피하였다. 즉 금융부문에서 부

적절한 관리 및 통제, 화폐시장과 증권시장 부재, 은행의 과도한 부실채권, 금융기관간 경쟁부족 등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헝가리의 금융제도는 실제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소수의 국영은행에 의하여 금융업무가 이루어졌다.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은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금융기관간 경쟁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헝가리는 1989년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기 전인 1987년부터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가. 제도적 기반 구축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 새로운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은행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이들 법률 혹은 금융개혁법 등 관련법률을 새로 제정해야만 했다(표 3-1 참조).

헝가리가 체제전환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작업은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거래를 수행하던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원적 은행제도란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각각 고유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헝가리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목표로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은행감독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등 대체로 독립성

을 확보하였다.¹⁴⁾ 또한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헝가리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전반적인 경제개혁 추진 이전인 1987년에 도입했다. 이는 헝가리가 구체제시절부터 경제개혁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금융개혁을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앞서 착수한 결과, 헝가리는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을 대체로 199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즉 근대적 금융제도가 민영화 등의 여타 경제개혁에 앞서 구축되었던 것이다.

〈표 3-1〉 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동향

기 간	내 용
1987. 1	- 은행법 개정(二元的 은행제도 도입)
1990. 4	- 국가자산청(State Property Agency) 설립
1990. 6	- 증권거래소 개장
1990. 10	- 新은행법 제정
1991 ~ 92	- 1차 은행위기: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 직면, 은행시스템 내 부실여신 비율 20.7%로 급증
1991. 9	- 파산법 채택
1991. 12	-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 再개정
1992. 1	- 부실여신 전담기구 신용통합기금(Credit Consolidation Fund) 설립
1992. 12	- 부실여신통합프로그램(consolidation programme for non-performing loans) 추진

14) 중·동구 주요국들은 체제전환 초기 이원적 은행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새로 설립된 중앙은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했다. 이는 이 국가들이 대개 서구의 중앙은행법, 특히 독일 중앙은행인 Bundesbank의 법을 원용하여 자국의 중앙은행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각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발효시켰는데, 1996년 12월 헝가리가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였다.

<표 3-1> 계속

기 간	내 용
1993 ~ 94	- 2차 은행위기: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 재발, 은행시스템내 부실여신비율 30%에 육박
1993. 1	- BIS 적정자본기준 적용
1993. 9	- 파산법 개정
1993. 12	- 은행통합프로그램(bank consolidation programme) 추진 - 가교은행(bridge bank)인 umbrella bank 신설
1994. 1	- 채무자조정프로그램(debtor reconciliation programme) 추진
1994. 5	- 은행통합프로그램에 따른 은행들에 대한 2단계 증자조치 실시
1994. 7	- 최초의 은행민영화 추진
1994. 12	- 은행통합프로그램에 따른 은행들에 대한 3단계 증자조치 실시
1995	- 3차 은행위기: 국영은행 Agrobank 지급불능사태 직면
1995. 7	- 건전은행/부실은행(good bank/bad bank) 접근방법으로 Magyar Hitel Banka 민영화
1996. 12	- 중앙은행법 개정 및 금융감독법 채택
1997	- 4차 은행위기: 헝가리 2대 소매금융은행 Postabank 예금인출사태 직면, 소규모 민영은행들 지급불능사태 직면
1997. 1	- 新은행법 제정
1998. 1	- 외국은행의 자회사를 비롯한 지점 설치 허용
1999. 1	- 은행부문의 중개 및 투자은행 업무 취급 허용 - BIS 新적정자본기준 적용

자료: 필자 작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쟁적인 금융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시장에 의해 금리와 대출, 저축 등이 결정되는 금융체제의 재편은 국내저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다. 헝가리는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은행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내외 은행의 신규 진입을 자유롭게 하였다. 이러한 설립절차의 간소화는 국유은행의 민영화와

더불어 체제전환 초기 많은 민간은행이 신설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체제전환 이후 상당기간 헝가리는 은행 등 금융부문의 관련법률 및 규정의 제정(enactment)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체제전환 이후 만들어진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과 같이 기존 법률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고 손질하는 데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나. 건전성 규제 및 은행감독체계 강화

헝가리는 EU 가입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여신의 질(quality)이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간 느슨했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부실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부실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헝가리는 G-10의 규범과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건전성 분류여신에 대해 최소한의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헝가리의 은행부문 건전성은 중·동구 국가 중 가장 좋은 편이다. 1997년 17.5%에 달하던 BIS 기준 新자기자본비율이 최근 중견은행들의 위험자산 증가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01년 말 현재 13.9%를 기록, BIS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시키고 있다.¹⁵⁾ 또한 2001년 말 현재 無수익여신은 전체여신의 3.1%에 불과한데, 이 중 대부분이 “요주의(watch)” 여신으로 분류되어 있다.¹⁶⁾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는 한 나라의 은행부문을 효과적으로 규제

15) NBH(2002), p. 69.

16) NBH(2002), pp. 56~58; EBRD(2002), p. 160.

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독기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둘째 은행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¹⁷⁾ 셋째 은행활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에 대한 건전성 규정을 두며, 넷째 은행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국제기준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¹⁸⁾ IMF는 이와 같은 바젤위원회의 기준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중·동구 체제전환국가로 헝가리를 선정한 바 있다.¹⁹⁾ 그 이유는 헝가리가 1997년 1월 겸업은행 체제로의 전환과 통합감독기관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新은행법을 발효²⁰⁾시킴으로써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모두 감독하는 하나의 금융감독기관을 설립,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헝가리는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파산법은 1992년에 제정되었으나, 너무 엄격해 오히려 기업부도를 촉진한다²¹⁾는 비난에 따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同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는 은행부문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감독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보유자산에 대해 국가위험도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토록 하였다. 이는 러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은행부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외화자산은 물론 유가증권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말 30%이던 외화자산의 비중이 1998년 말에는 36%로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의 비중 역시 11%에서 14%로 증가한 것으

17) 주주자격, 적정자본금 규정 등 철저히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1997) 참조.

19) IMF(1998) 참조.

20) 新은행법의 발효로 1998년 1월부터 외국은행의 자회사를 비롯한 지점의 설치가 허용되었고 1999년에는 은행부문도 중개 및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21) 헝가리의 경우 1992년의 파산법 발효로 기업부도시 지체 없이 소송을 통해 부도기업을 처분하거나 파산시킬 수 있는 automatic trigger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同 법 시행 이후 부도기업 수가 급증, 오히려 기업부도를 촉진한다는 비난이 일자, 헝가리 정부는 경제에의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1993년 중반 同 제도를 폐지하였다(한정철 1998).

로 나타났다. 2001년 말 현재 외화자산비율은 34.2%이며, 유가증권의 비중은 19.7%에 달하고 있다.²²⁾ 외국계 은행의 증권중개사업 손실과 자산규모 2위의 소매은행(retail bank) 파산으로 통화당국은 1998년 말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헝가리의 은행감독체계를 보완하여 同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은행민영화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 舊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내자본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체제시절 이래 국가가 은행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의 소유권 이전 문제는 주로 외국인에 의한 지분인수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동구 국가들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이 크고 은행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국내에서 문제은행을 인수할 만한 대규모 우량은행을 물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국 정부는 문제은행의 인수자로 외국인을 최선의 투자자로 고려하게 된다. 또한 구체제시절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국유은행, 그리고 국유기업간의 연결고리에서 기인한 연고여신(connected loan)이 금융개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유치가 은행개혁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즉 외국은행은 연고여신을 취급할 가능성이 적고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금융기법 및 기술의 전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중·동구 국가들은 시장규모가 협소해 자국의 은행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이다. 게다가 중·동구 국가들이 가입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OECD나 EU 등에서도 외국인의 자유로운 진입 허용을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헝가리의 은행부문은 2001년 말 현재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이 GDP

22) NBH(2002), p. 62; NBH(2003).

의 30.6%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 규모가 작은 편이나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²³⁾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과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정책 등에 힘입어 중·동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헝가리의 은행부문 구조조정작업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1998)에 따르면, 1992~96년 중 이에 소요된 비용은 GDP의 약 10%에 이르며, 헝가리 정부는 이후의 민영화 수입을 통해 同 비용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였다.

은행부문의 정부보유 지분 매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7대 은행의 대주주가 아니다. 7대 은행의 민영화는 대부분 외국금융기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등이 7대 은행 중 5개 은행의 전략적 다수지분(대주주)을 보유하고 있다. 7대 은행 중 나머지 2개 은행은 헝가리 최대은행인 국가저축은행(National Saving Bank; OTP)과 가장 부실한 Postabank인데, OTP는 정부가 최소한의 비토지분만을 보유하고 공모방식(public offerings)을 통해 전격 민영화되었으며, Postabank는 아직 국유상태이다. 수신고 측면에서 헝가리 2대 은행인 Postabank는 지속적으로 자본금을 증액(recapitalization)해 이제는 국가가 이 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9년 헝가리에 최초의 외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헝가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헝가리에 외국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헝가리 정부의 은행민영화가 추진되면서부터였다. 헝가리의 은행은 대부분

23) EBRD(2002)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은행산업의 비중이 높았던 체코가 上記 비율이 24.5%이며, 헝가리와 함께 개혁선도국으로 평가되는 폴란드는 同 비율이 18.4%에 불과하다.

1990년대 하반기에 민영화가 완료되었는데, 1995~2000년 동안 총 10개의 은행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이러한 은행의 민영화와 외국은행의 헝가리 은행시스템 진출 결과, 2000년 말 현재 헝가리 은행시스템 전체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총지분은 21.3%이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66.6%에 달한다. 또한 총자산 규모로 1990년에 81%에 달했던 국유은행의 비중은 2000년에는 9%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1990년 10%에 불과하였던 외국은행의 비중은 2000년에 62%까지 증가하였다.

라. 금융부문의 부실여신 처리

체제전환 직후 국내경기 침체와舊코메콘체제의 붕괴로 대기업들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1987년 0.4%이던 총여신에 대한 부실여신비율이 1991년에 7.1%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말 정부는舊 체제하에서 대출된 부실여신의 50%를 보증해주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2~93년 중 은행권의 부실여신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91년 12월 개정 은행법 및 회계법의 발효로 여신 분류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정상(standard),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악성(bad) 등 4단계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1992년 4월 강도 높은 파산법이 발효됨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여신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同 충당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표 3-2〉 헝가리의 부실여신 처리방법

중앙집권적 방법	분권화된 방법
☐ 신용통합기금(Credit Consolidation Fund) - 1992년 헝가리 산업개발은행(MBFB Rt)에 창설 - 당시 은행부실자산의 1/3 정도만 인수되는 등 실적 부진	☐ 부실여신통합프로그램(Consolidation program for non-performing loans) - 14개 일반은행과 78개 저축조합의 보유 부실여신을 정부채권으로 교환(1992년) ☐ 은행통합프로그램(Bank Consolidation Program) - 구조조정채권을 통해 신주발행분을 인수하거나 가교은행을 통해 납입자본금이나 후순위채권을 지원→자본금 확충(1993년) - 은행내 부실여신 전담반 신설

자료: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한정철(1999) 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체제전환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헝가리에서는 정부채권으로 부실여신을 인수하는 이른바 채무채권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적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부실여신을 기업지분과 교환하는 채무주식화 방식도 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탕감하는 은행들을 보상하고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채권을 자본금 출자형태로 공급하는 자본금확충(recapitalization)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민간은행들은 청산이나 폐쇄되었고, 정치적 저항이 큰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증자(conditional recapitalization)라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1992년 초 헝가리 정부는 부실여신의 전담관리를 위해 산업개발은행(MBFB Rt)에 신용통합기금(Credit Consolidation Fund)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와의 협상력은 은행들의 부실규모와 비례한다는 구체제적인 발상이 만연해 있어 상기 기금을 통한 중앙집권적인 부실여신 처리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분권화된 방법으로 전환, 1992년 12월 부실여신통합프로그램(consolidation programme for non-

performing loans)을 마련하여 14개 일반은행과 78개 저축조합(savings cooperative)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여신을 정부채권으로 교환해주었다.

하지만 1993년 들어 은행권의 총여신에 대한 부실여신 비중이 26%에 달하자, 헝가리 정부는 상기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실채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부실여신의 추가 인수와 병행하여 은행의 자본금을 증액시키기 위한 은행통합프로그램(bank consolidation programme)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유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3단계에 걸쳐 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1차 시한인 1993년 말까지는 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의 마이너스 상태(평균 -15%)에서 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차 시한인 1994년 5월에는 4%, 최종적으로 1994년 말에는 8%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증자대상은행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와 구조조정계약(consolidation contract)을 체결하고, 경영합리화와 민영화를 통한 내부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부실기업들과의 조정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했다. 이 계약을 체결한 각 은행은 1994년 5월에 이루어진 증자에 따라 구체적인 통합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했다.²⁴⁾ 정부는 同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은행들의 자본금을 증액시키고 정부가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였지만, 참가은행의 악성부채를 인수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은행의 자본금 증액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부실여신 특별전담반(bad-debt-workout department)에 부실자산을 이전토록 하였다. 同 전담반은 인수받은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자들과 협정을 체결 또는 탕감하는 등 자체적인 부실여신 정리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 은행들의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24) 이는 1993년 12월에 정부와 약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일부 은행이 제출한 프로그램은 완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기도 하였다.

1994년 초 헝가리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최종 프로그램으로 채무자조정프로그램(debtor reconciliation programme)을 마련하였다. 부실기업의 채무재조정을 위한 同 프로그램은 부실여신 정리가 필요한 1,200개 기업에 대해 부실여신의 매각이나 탕감 등을 통해 은행과 기업간의 채무재조정을 유도하여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同 프로그램을 통해 1994년에서 1996년 중반 사이 헝가리 은행들은 전체 은행권 자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악성채무를 매각하거나 탕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헝가리는 부실여신 처리에 있어 우량은행/부실은행(good bank/bad bank) 접근방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1995년 7월 MHB(Magyar Hitel Banka)의 민영화에 적용된 상기 접근방법에 의해 MHB의 부실자산을 새로 설립된 자회사 Risk Kft에 모두 이전되었다. 그 후 우량은행 MHB는 성공적으로 민영화되었으며, 부실은행 Risk Kft는 3년 뒤 청산되었다.

2.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부실금융기관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이 제고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혼란이 수습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경제회복기반의 조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 기업평가능력의 향상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금융기관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헝가리가 금융개혁에 의해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제도를 얼마만큼 선진화하였으며, 금융제도의 포괄성과 효율성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성과를 살펴본 다음, 금융중개기능의 향상,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 회복 등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분석하도록 한다.

가. 제도적 측면의 금융개혁 성과

헝가리의 은행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여건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매우 열악하였다. 엄격하지 못한 은행허가제도 및 건전성규정은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 은행시스템에 많은 새로운 은행의 진입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실 은행들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심각한 은행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헝가리는 은행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전성규제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자국내 은행들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중·동구 국가 가운데 은행시스템 관련 제도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국가는 헝가리이다. 헝가리는 1992년 은행위기를 경험하면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93년에 건전성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5~96년의 은행위기를 계기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건전성규제를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금융개혁 이후 헝가리의 금융제도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는 동구 26개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을 매년 모니터링하는 EBRD의 평가가 가장 유효할 것이다.²⁵⁾ EBRD의 평가에 따르면, <표 3-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헝가리의 경우 금융제도 관련법률의 포괄성과 효율성은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3〉 중·동구 주요국 금융제도 관련법률의 포괄성과 효율성

국 가	1997			1999			2000		
	포괄성	효율성	총평	포괄성	효율성	총평	포괄성	효율성	총평
헝가리	4	4	4	4	4	4	4	4	4
폴란드	4	4+	4	4	4	4	4	4	4
체코	4	4	4	3+	2+	3	4	3-	3+
불가리아	3	3	3	3	2+	3-	3	2+	3-
마케도니아	2	2	2	3	2	2+	3	2-	2+
에스토니아	4	4	4	4	3+	4-	4	3-	3+
라트비아	3+	3	3	3	2	3-	3	3	3
리투아니아	4	3	3	3-	2	3-	4	4-	4-
슬로바키아	3	3	3	3+	3	3	3	3	3
루마니아	3	3	3	3+	4-	3+	3+	4-	4-
러시아	3+	3	3	4-	2+	3	4-	3	3+
우크라이나	2	2	2	2	2	2	3	2+	3-

주: 점수의 범위는 「1~4+」이며, 포괄성과 관련하여 ‘점수:1’은 관련법률의 적용범위가 매우 적은 상태이며, ‘점수:4+’는 同 법률의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그 기준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경우를 상징하고 있음. 한편 효율성과 관련하여 ‘점수:1’은 同 법률이 매우 애매하고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며, ‘점수:4+’는 금융시장의 감독당국이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징하고 있음.

자료: EBRD(1997, 1999, 2000).

25) EBRD는 매년 Transition report를 통해 ‘포괄성(extensiveness)’과 ‘효율성(effectiveness)’을 기준으로 금융제도 관련법률을 평가한 자료를 제시한다. 은행부문 및 자본시장 관련법률들의 ‘포괄성’은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규정하고 있는 은행감독의 핵심원칙들이나 국제유가증권감독기구(IOSCO)의 유가증권 거래원칙 등과 같은 최소한의 국제기준들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효율성’은 이 법률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독당국이 부실은행이나 부실기업, 그리고 관련법률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그 빈도 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고려된다. 결국 이를 통해 중·동구 분석대상국의 경우 은행 및 증권활동에서의 신뢰 구축을 위해 금융제도 관련법률과 규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헝가리는 EU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은행시스템 내부의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EU 지침에 의거하여 금융제도를 EU 기준에 근접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헝가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EBRD는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헝가리가 은행, 자본시장 및 보험부문을 통합 감독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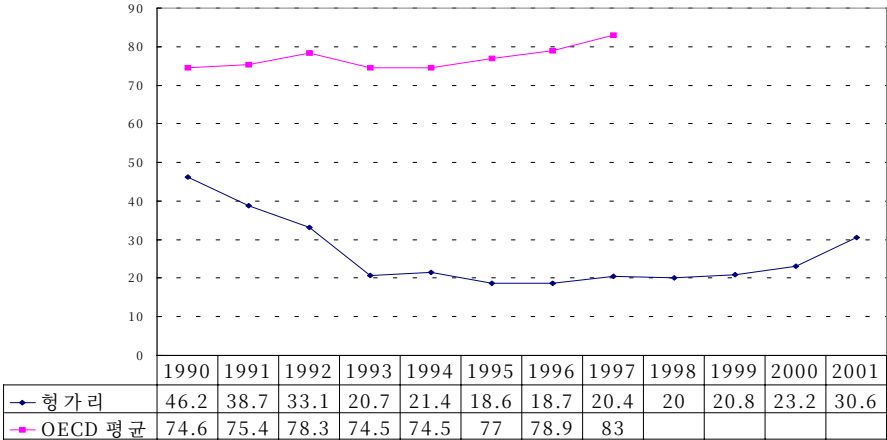
나. 금융개혁성과지표 분석

금융개혁의 1차적인 목표는 자국 금융시스템의 금융중개능력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데 있다. 금융개혁 이후 금융중개기능의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GDP 대비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과 M2의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경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예금자들이 금융시스템으로 되돌아오면 예금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M2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GDP 대비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의 지나친 상승세는 잘못된 대출관행의 지속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同 비율의 급격한 하락은 신용경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헝가리는 대체로 금융개혁 이후 금융중개능력을 향상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에서 민간부문신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M2의 비중 모두 별다른 개선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헝가리의 금융중개능력은 아직 매우 미약하다.

〈그림 3-1〉 민간부문의 신용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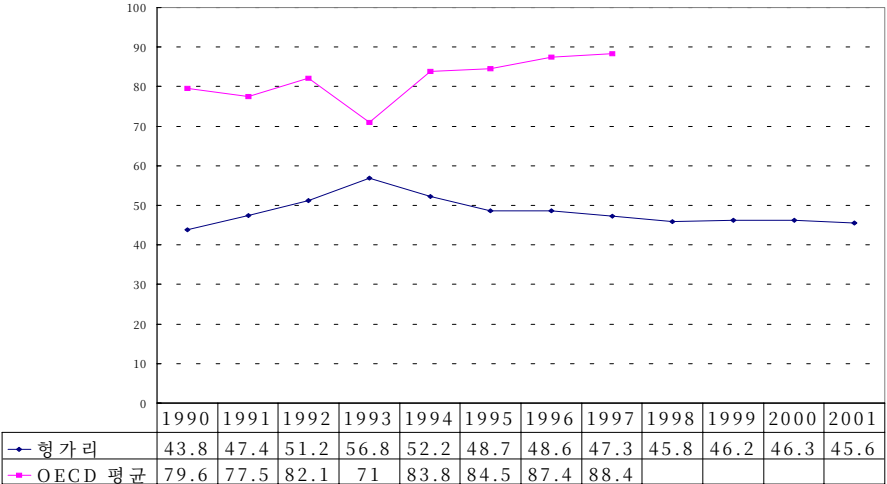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BIS(2001); NBH(2001a); EBRD(2002).

〈그림 3-2〉 총통화 비중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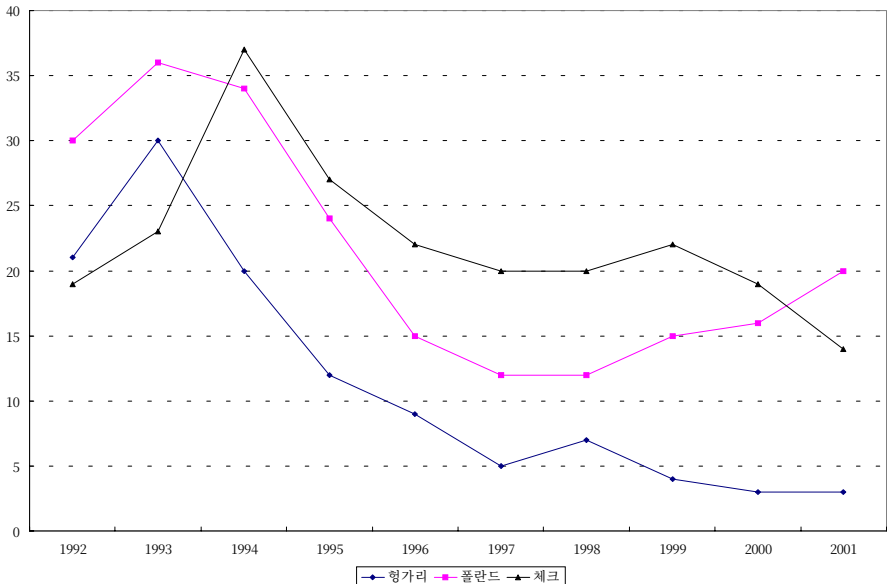


자료: BIS(2001); NBH(2001a); EBRD(2002).

금융개혁 이후 은행부문의 건전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는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무수익여신의 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이 있다.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무수익여신의 비율은 <그림 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同 비율이 1997년부터 5% 이하로 개선되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함으로써 헝가리가 중·동구 체제전환국 가운데 부실채권 처리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⁶⁾

〈그림 3-3〉 중·동구 주요국의 부실여신¹⁾ 비중 추이

(단위: %,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부실여신 비중)



주: 1)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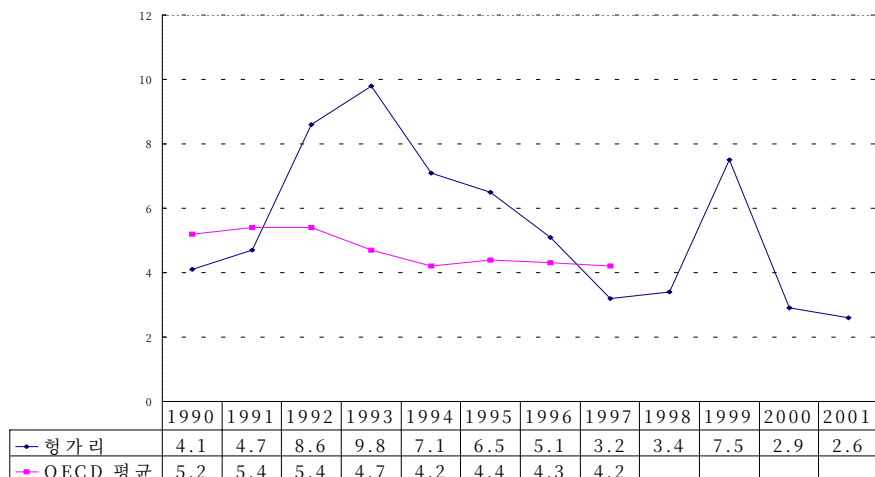
자료: EBRD(2002); OECD(1996); IMF(1999) 및 각국 중앙은행 발표자료.

26) 대체로 선진국의 평균 부실여신비율은 총여신의 5% 이하이며, 신흥개도국들은 10~2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헝가리가 BIS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림 3-4〉 예대금리차 추이

(단위: 연율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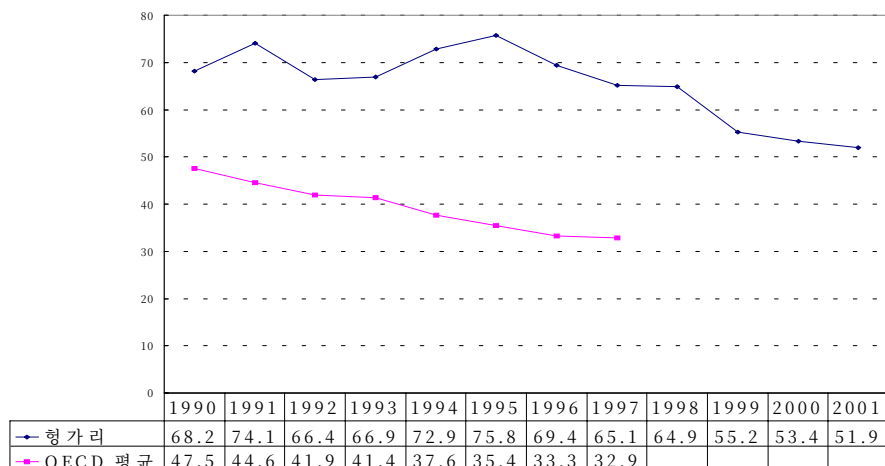
자료: BIS(2001); NBH(2001a); EBRD(2002).

금융부문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예대금리차를 들 수 있다. 은행계정의 기본적인 자금조달이 예금이며, 자금운용은 대출이므로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이다. 그런데 금융시스템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면 예대금리차는 줄어들고 결국 이로 인한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예대금리차 추이를 살펴보면, 헝가리는 1993년 이후 예대금리차가 축소되어 은행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97년부터는 선진국 수준보다도 낮은 예대금리차를 보이고 있어 최근 선진외국은행의 헝가리 은행산업 대거 진입으로 은행산업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3-5〉 총예금대비 현금비율

(단위: 기말 기준, %)



자료: BIS(2001); NBH(2001a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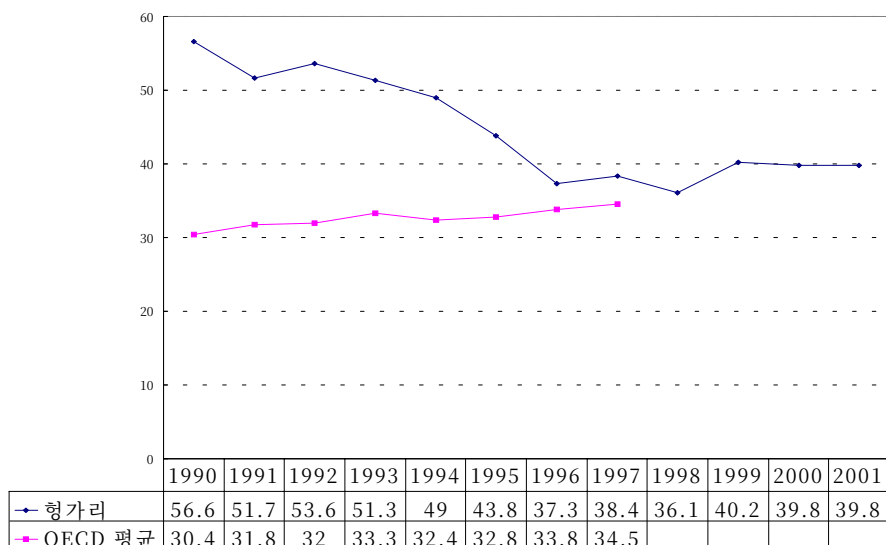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금융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였는가는 바로 떨어진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했는가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정도는 총예금 대비 현금비율과 M1/M2비율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시장참여자들은 현금과 이에 준하는 요구불

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현금선호도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통해 금융개혁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5>에 따르면, 헝가리의 총예금 대비 현금비율은 1995년 정점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은 확실하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현금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M1/M2비율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뚜렷한 감소추세를 시현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특히 同 비율은 선진국 수준과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선진국 수준에 수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M1/M2비율

(단위: %)



자료: BIS(2001); NBH(2001a); WEIS(2002).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헝가리는 중·동구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을 본격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여타 체제전환국에 비해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등 이른바 헝가리의 양호한 초기 여건이 성공적인 경제개혁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舊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는 등 헝가리는 이미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 경험이 풍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초기 여건과 풍부한 경제개혁 경험만으로 헝가리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중도에 경제개혁을 포기하게 만든 것과 유사한 경제위기가 헝가리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크게 세 번에 걸친 은행위기로 금융시장이 커다란 혼란을 겪었으며, 1997년에는 이러한 은행위기가 대외신뢰도 상실을 야기해 통화위기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중·동구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혁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헝가리가 체제전환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는 데 10년이나 소요되었다. 이처럼 헝가리도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처럼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개혁실패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때로는 개혁 후 유증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과 완만한 경제회복에 따른 저성장을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헝가리가 이와 같이 단절 없는 경제구조 개혁을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과 개방에 대한 범국민적인 동의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여타 체제전환국과 마찬가지로 1989년부터 체제전환에 착

수한 이래 한번도 집권여당이 2기 이상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만큼 개혁 후유증이 심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은 매번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바뀌었다. 그러나 헝가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서구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감한 개혁과 개방뿐이라는 인식이 체제전환 초기에 범국민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기본적인 경제개혁노선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변화나 단절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표 4-1〉 헝가리의 대외신용등급 변화 추이

Moody's		Standard & Poor's		FitchRatings	
신용등급 ¹⁾	변경시점	신용등급 ¹⁾	변경시점	신용등급 ¹⁾	변경시점
A1(현재)	12-11-2002	A-(현재)	19-12-2000	A-(현재)	30-11-2000
A3	14-11-2000	BBB+*P	02-02-2000		
Baa1*P	13-09-2000	BBB	11-12-1998	BBB+*P	01-10-2000
Baa1	25-06-1999	BBB-*P	22-01-1998		
Baa2	09-05-1998	BBB-	28-10-1996	BBB+	29-10-1999
Baa3*P	20-03-1998	BB+	31-01-1996		
Baa3	19-12-1996	BB+*N	07-02-1995	BBB	24-06-1997
Ba1*P	14-10-1996	BB+	23-11-1994		
Ba1	13-07-1990	BB+*P	20-04-1992	BBB-	25-04-1996
Baa2	18-07-1989				

주: 1) 외환장기채에 대한 신용등급으로 *P는 긍정적(Positive), *N은 부정적(Negative),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안정적(Stable)임.

자료: NBH(<http://www.mnb.hu>).

부문별 경제개혁에 있어 헝가리는 특히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된다. 헝가리 금융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측면과 금융지표를 통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회복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부문의 건전성 개선도 두드

리졌다. 하지만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중개능력 향상은 아직까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헝가리의 금융개혁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곧 대외신인도에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헝가리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대외신인도가 2~3단계 상향조정되었다.²⁷⁾

전반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舊소련으로부터 독립한 CIS와 발틱 국가들은 다소 늦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체제전환에 착수하였다. 1990년대 동안 CIS를 포함한 동구 국가들이 추진한 경제개혁은 그 수준과 성과가 국가 혹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말 단일은행체제를 이원적 은행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금융개혁, 그후 발생한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최근 EU 가입을 위한 금융부문 개발 등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은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비해 국별 혹은 지역별로 더욱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CIS를 포함한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현재 금융부문 개발단계 또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발수준에 따라 동구 체제전환국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⁸⁾ 첫째는 금융부문 개발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혁선도국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포함된다. 둘째는 개혁선도국 그룹을 부지런히 뒤쫓고 있으나, 이에 다소 못미치는 개혁도상국 그룹이며, 여기에는 체코와 슬로베니아가 해당된다. 셋째는 구체제와 신체제가 혼재하고 있는 부분개혁국 그룹이며,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가 이 그룹에 속한다. 넷째는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개혁실패국 그룹이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27) Deutsche Bank. Focus Eastern Europe Online.

28) Bokros(2001), pp. 13~27.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금융부문이 제일 취약하여 언제든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재발위험국 그룹이다.

헝가리와 같은 개혁선도국 그룹의 금융개혁사례는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향후 자국의 금융부문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매우 유익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진한 부분개혁국 그룹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실패국 그룹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헝가리의 금융개혁 경험이 귀중한 정책대안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헝가리의 금융개혁사례로부터 그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부문 개발정도 구분

그룹	각 그룹별 금융부문 개발정도
개 혁 선 도 국	①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대형은행 통제 ② 외국자본이 전체 은행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위치 점유 ③ 대부분의 은행이 여신포트폴리오, 적정준비금, 자기자본비율 등이 양호 ④ 내부지배구조의 서구 수준 근접 ⑤ 법인영업에 있어 서비스 질의 급격한 개선 ⑥ 소매금융부문의 급격한 발전, 광범위한 서비스개발 ⑦ 자본시장(정부채권 및 주식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유동성이 풍부 ⑧ 제도의 선진화 완료, 규정의 적용기법 개선이 진행 중 ⑨ 경쟁적 환경 조성, 진·출입 규정 양호 ⑩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의 완전자유화 ⑪ 민영화에 대한 저항 극복 ⑫ 연금개혁 및 기금관리 선진화단계
개 혁 도 상 국	① 대형은행들이 아직 정부의 통제하에 있거나 최근에 막 민영화됨 ②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의 진입에 냉담함 ③ 선도은행들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완료 ④ 대형은행들을 제외한 중간 이하 규모 은행들의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건전함 ⑤ 지배구조 개선 필요

<표 4-2> 계속

그룹	각 그룹별 금융부문 개발정도
개 혁 도 상 국	⑥ 서비스의 질과 소매금융이 최근 개발 중 ⑦ 자본시장이 비교적 소규모, 다소 유동성 부족 ⑧ 제도는 개선 중이나 적용기법 미흡 ⑨ 국내금융서비스에서 경쟁 심화 중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조치 필요 ⑪ 추가적인 자유화에 반대 및 다소의 저항 지속 ⑫ 연금개혁 및 기금관리는 아직 초기단계
부 분 개 혁 국	① 대형은행들이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있거나, 매각될 예정임 ② 구조조정 추진된 모든 은행에 대해 민영화 강력히 촉구 ③ 지급불능에 처한 다수의 은행이 아직 구조조정 중이거나 청산됨 ④ 몇몇 중견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신포트폴리오가 매우 불량함 ⑤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가 매우 제한적 ⑥ 서비스의 질과 소매금융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중 ⑦ 자본시장이 협소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며, 외국인 참여율이 낮음 ⑧ 제도는 개선 중이나 여전히 소극적이며,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짐 ⑨ 경쟁이 매우 취약하며 지역별 혹은 분야별로 시장이 분리되어 있음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 아직 초보 수준 ⑪ 국경간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아주 진지함 ⑫ 재정적,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여 연금개혁은 거둬 연기됨
개 혁 실	① 일부 지급불능에 처한 대형은행이 아직 정부의 통제하에 있음 ②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부실은행을 매각하려는 시도 여러 차례 실패 ③ 다수의 지급불능 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이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 ④ 신용거래자가 거의 없어 건전한 포트폴리오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⑤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가 극히 제한적 ⑥ 서비스의 질은 아주 천천히, 소매금융은 보다 빠르게 개선됨 ⑦ 자본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유동성이 없으며, 외국인의 참여가 적음

<표 4-2> 계속

그룹	각 그룹별 금융부문 개발정도
패 국	⑧ 제도는 개선 중이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측성이 결여됨 ⑨ 경쟁이 매우 취약하고 외국은행 지점이 매우 제한적인 역할 수행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 아직 초보 수준 ⑪ 국경간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아직 추진되지 않음 ⑫ 기관투자자 부족, 연금개혁은 뒷전
위 기 재 발 위 험 국	① 대부분의 은행이 민간은행이며,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함 ② 선택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략적 외국인투자자에 대 해 냉담 ③ 다수의 은행에 대한 면허 취소와 청산이 필요 ④ 포트폴리오가 매우 불량하며,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⑤ 부패, 범죄, 관료주의 만연 ⑥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고 소매금융은 이제 초보단계 ⑦ 자본시장은 협소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며, 오용되는 경향이 있음 ⑧ 제도가 취약하며, 제도의 적용은 공개적으로 정치적임 ⑨ 국내시장은 붕괴 직전이며 독점되고 있음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⑪ 금융자유화에 대해 매우 적대적임 ⑫ 재정적 위기의 만연으로 연금개혁은 고려대상이 아님

자료: Bokros(2001), pp. 13~27로부터 필자 정리.

첫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운영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및 제도구조조정(institutional restructuring)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금융구조조정은 재무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 및 내부지배구조 개혁 등의 운영구조조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견제하는 제도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운영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에는 민영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선진 외국은행을 민영화에 참여시키면 해당

금융기관 운영의 합리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이 강화되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만 추진하면 금융위기의 극복이 지연되거나 위기가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기업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면 이로 인해 다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헝가리의 금융개혁은 효과적인 제도구조조정과 성공적인 은행민영화, 그리고 기업과 금융부문의 동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금융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상기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의 금융개혁은 개혁 이후 기업부실이 다시 금융부문의 부실을 야기한 실패사례, 정부의 재정지원을 은행·공기업의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금융개혁에 성공한 사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금융개혁을 추진할 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예금보험공사. 2001.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연구총서 2001-1.
- 오정근. 1999. 『우리나라 은행민영화의 경험과 시사점』. 금융경제연구 1999. 10 제98호. 서울: 한국은행.
- 왕윤중 외. 2000. 『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용역보고서 2000년 12월.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이철원. 2001.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조사 분석 01-10.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조운제. 2000.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와 과제」. 제6차 한·미 21세기위원회 보고서. 2000년 12월. 서울: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1999. 『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조사자료연구 99-17.
- _____. 2000. 「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조사통계월보』. 2000년 9월호. 조사국 해외조사팀.
- 최희갑. 2001.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은행업을 중심으로』. 2001년 5월.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한정철. 1998. 「中·東歐 體制轉換國의 부실채권 처리현황과 시사점」. 『季刊 對外經濟政策研究』. 1998년 여름호.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_____. 1999. 「中·東歐 주요 體制轉換國의 은행시스템 발전현황과 과제」. 『季刊 對外經濟政策研究』. 1999년 겨울호.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홍유수. 1992.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정책연구 92-19.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해외문헌〉

-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1997. *Core Principles of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BIS. Basle.
- Begg, David K. H.. 1996. "Monetary Poli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essons After Half a Decade of Transition." IMF Working Paper 96/108. IMF.
- BIS. 2001. *The Banking Industry in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Competition,*

- Consolidation and Systemic Stability*. BIS Papers No. 4. (August)
- Bokros, Lajos. 2001. "A Perspective on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inancial Transi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Challenges of the New Decade*, Edited by Bokros, Lajos, Alexander Fleming, and Cari Votava. The World Bank. (July)
- Bonin, John P., and Mark E. Schaffer. 1995. "Banks, Firms, Bad Debts and Bankruptcy in Hungary 1991-94."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 234 (April)
- Daniel, James A.. 1997. "Fiscal Aspects of Bank Restructuring." IMF Working Paper No. 97/52. Washington: IMF. (April)
- Deutsche Bank. *Focus Eastern Europe Online*.
- EBRD. 1995~2002. *Transition Report*.
- Global Insight. 2003. *Emerging Europe: Monthly Outlook*. (March)
- HCSO(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02. *Statistical Yearbook of Hungary (2001)*.
- IMF. 1996.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 _____. 1998.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Developments, Prospects, and Key Policy Issues*. (September)
- _____. 1999.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_____. 2003.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Market Developments and Issues*. (March)
- Kawalec, Stefan and Krzysztof Kluza. 2001. "Challenges of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In Bokros, Lajos, Alexander Fleming, and Cari Votava eds. *Financial Transi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Challenges of the New Decade*. The World Bank. (July)
- NBH(National Bank of Hungary). 2001a. *Annual Report 2000*. Budapest. (April)
- _____. 2001b.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Budapest. (May)
- _____. 2002.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Budapest. (December)
- _____. 2003. *Press Release*. (<http://www.mnb.hu>)
- OECD. 1991. *Economic Surveys: 1991 Hungary*. Paris.
- _____. 1995. *Economic Surveys: 1995 Hungary*. Paris.

- _____. 1996. *Economic Surveys: 1995 ~ 1996 Czech Republic*. Paris.
- _____. 1997. *The New Banking Landscap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y Experience and Policies for the Future*. OECD Proceedings.
- _____. 1999. *Economic Surveys: 1999 Hungary*. Paris.
- _____. 2002. *Economic Surveys: 2002 Hungary*. Paris.
- Schweickert, Rainer. 2001. "EU-Enlargement and the Euro - One Money for all the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Vol. 5, No. 2. Seoul: KIEP. (December)
- Sheng, A.. 1996. *Bank Restructuring: Lessons from the 1980s*. World Bank.
- Tang, H., E. Zoli, and I. Klychnikova. 2000. *Banking Crises in Transition Countries: Fiscal Costs and Related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vember)
- Van Elkan, Rachel. 1998. "Financial Markets in Hungary." In Carlo Cottarelli and others. *Hungary: Economic Policies for Sustainable Growth*. IMF Occasional Paper No. 159.
- Van Wijnbergen, Sweder. 1996. "Bank Restructuring and Enterprise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EBRD Conference on Policy Studies to Promote Private Sector Development. London. (April)
- WEIS(World Economic Information Service). 2002. *ARCレポート 2002; ハンガリー*—(*Republic of Hungary*).
- WIIW. 1999 ~ 2002. *WIIW Handbook of Statistics: Countries in Transition*.
- World Bank. 2001. *Financial Transi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Challenges of the New Decade*, Edited by Bokros, Lajos, Alexander Fleming, and Cari Votava. The World Bank. (July)

Executive Summary

Lessons from Economic Reform in Hungary: Emphasizing the Financial Sector

Cheol-Won Lee

This research assesses the economic reforms of Hungary, especially focusing on the financial sector, in order to provide a current view of the business climate of the financial sectors in transforming Hungary and also to consider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reform process of other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policy lessons for countries like Bulgaria and Romania which are still suffering from cumulative bad loan problems and need to privatize banks which had become state-owned in the early attempt to restructure financial industry. Assessing the status of financial sector reform in Hungary will also enable us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and policy tasks countries in the region are facing.

After 10 years of transition, Hungary entered the new millennium with a booming economy and as a front runner in economic reform. By any measure, Hungary's performanc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has been excellent. Since 1997, GDP growth has averaged more than 4.7 per cent and exports have expanded at double-digit rates. Past reforms have played a critical part in this success.

On the whole, Hungary has shown better achievements in market institution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an othe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Prior experience in economic reform and favorable initial conditions are regarded as two key factors underlying the success of Hungary's economic reform. But, a more important factor is the persistence of the reform. Hungary has continued to implement economic reforms for more than ten years despite the economic depression.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of financial sector reform in Hungary, focusing on two aspects: institutional reform and developments in financial indicators. Hungary stands out for its good performance in institutional restructuring, achievement of a stronger and more efficient financial system and recovery of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ector. The country is also one of the leading performers in terms of soundness of financial indicators. Still, in terms of financial intermediation, Hungary remains underdeveloped, even after restructuring. However, Hungary's high performance in terms of financial sector reform has been widely recognized by investors, nurturing improved investment sentiment.

Based on their level of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re divided into five groups. Countries in the leading performer group, such as Poland and Hungar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financial restructuring and are deemed to have an advanced financial sector equivalent to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countries, such as the Czech Republic and Slovenia, that are trying to follow the leading performers but still remain way behind. The slow reformers, such as Croatia and Slovakia, have elements of both the new system and the old communist system. The fourth group, including Bulgaria and

Romania, have fallen short in undertaking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while such countries as Russia and the Ukraine form a fifth group that must be closely monitored due to a higher risk of financial crisis.

Examining the experiences and challenges of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 useful model for financial restructuring policies in Eastern Europe and help policy makers in latecomer economies to come up with extensiv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plans in the near future. For those countries which started their restructuring drive earlier but were less successful, lessons from the Hungarian experience will also enlighten them on ways to correct policy mistakes. Mainly focusing on Hungary, with some review of neighboring transition economies,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financial sector reform.

First, successful financial sector reform hinges on a harmonized undertaking of operational restructuring, financial restructuring and institutional restructuring. In other words, financial sector reform should be targeted at market-oriented management, reform of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and reshuffling of the financial structure. In addition, a working institutional framework must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profitability and soundness.

Second, privatization 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private shareholders is considered essential to successful operational restructuring. Active participation of foreign banks armed with advanced management capability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for instance, will bring about rational management and strengthen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ird, financial restructuring with lagging enterprise restructuring tends to

cause slower recovery from financial crisis or re-ignite crisis, at worst. Resolution of solvency problems 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futile if the enterprise sector keeps foot-dragging in restructuring efforts. Hungary, by carrying out enterprise restructuring along with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has become a model for successful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KIEP 발간자료목록(1997~2003. 7)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전기업을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 · 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 · 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 · 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忠彥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 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明錫

정책연구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王允鍾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王允鍾 編著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金準東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崔秀雄
97-05	OECD 賄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金鍾範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議論動向과 對應課題	李鍾華・李晟鳳
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王允鍾・羅秀燁
97-08	中國經濟의 浮上和 韓國의 對應	李昌在 外
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金南斗 外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趙明哲
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鄭余泉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外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濤 外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趙顯竣
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①	張亨壽・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況과 과제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王允鍾・金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柳在元・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李昌在 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李晟鳳・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張亨壽・李昌在・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開展方向	徐錫興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 II	Byung-il Choi・Eun Mee Kim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張亨壽・元容杰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鄭仁敎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金寬浩・李性美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尹昌仁
98-19	中・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鄭余泉・崔秉熙・韓貞澈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趙明哲・洪翼杓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全載旭・崔義炫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曹琮和 編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金元鎬 編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曹琮和 編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①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李昌在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②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鄭仁敎 外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99-1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②	黃祥仁・王允鍾・李晟鳳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③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李晟鳳 外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④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王允鍾 外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漳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敎・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旭・金準東・梁俊哲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煥・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產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대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분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崔洛均・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魯在峯・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權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鄭在植・曹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權栗・金玠慶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竣
02-17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鄭衡坤・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槿・楊斗鏞・吳奎澤・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외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鄭仁教·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趙濶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鄭聖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朴泰鎬·文字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②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金琮根
00-01	투명성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中心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姜文盛 · 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정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尹美京 · 李奎億

李哲元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cw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1998)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2001) 외

지역리포트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2003년 7월 25일 인쇄

2003년 7월 30일 발행

발 행 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한라인쇄 (02)503-3011 대표: 박노부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63-X 94320

89-322-6017-6(세트)

정가 5,000원

Lessons from Economic Reform in Hungary:

Emphasizing the Financial Sector

Cheol-Won Lee

양호한 초기여건과 풍부한 경제개혁경험이 성공적인 경제개혁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범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구조개혁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헝가리 경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헝가리는 특히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되는데, 헝가리의 금융개혁은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신뢰회복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부문의 건전성 개선도 두드러졌다. 헝가리와 같은 개혁선도국의 금융개혁 사례는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향후 자국의 금융부문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 매우 유익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178 FAX : 3460-1144



5,000원